

작년 GDP 대비 수출액 비중 36% 경제성장 기여도 5년 중 최고 수준

한국무역협회

성장률 2.04% 중 수출 1.93%p 기여
반도체 등 수출 회복, 생산유발액 증가
전년대비 6.9% 증가한 1.3조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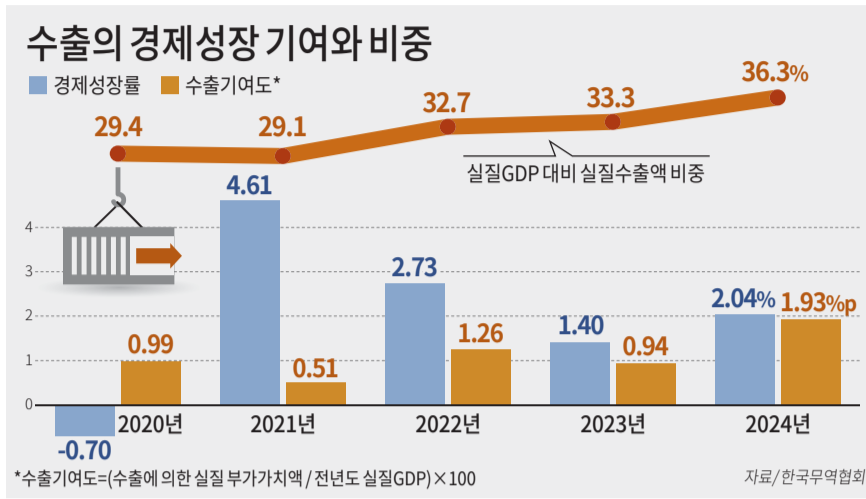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생산·부가
가치·고용 유발에 크게 기여하면서 한
국 전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역
할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9일 발표한 '2024년 수출의 국민경제
기여 효과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2.04% 중 수출
기여도는 1.93%포인트로 분석됐다.

이는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이며,
실질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36.3%로 2020년대
들어 가장 높았다.

2024년 우리나라 수출의 생산유발액은
전년 대비 6.9% 증가한 1조3012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2020년대 들어
최고치다.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의 수출 회복이
생산유발액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품목별 수출 생산유발액은
자동차가 2365억달러, 반도체 1854억
달러, 일반기계 771억달러 순이다.



생산유발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수출
의 생산유발도는 전년(1.93%)보다 소
폭 하락한 1.90으로 나타났다.

총수출이 국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부가가치율은 56.3%
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상승했다.
품목별 부가가치 유발액은 반도체
(789억달러)가 가장 높았고, 자동차
(579억달러), 일반목적용 기계(225억
달러)가 뒤를 이었다.

작년 한 해 동안 수출로 인해 유발된
취업자 수는 총 416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2858만명 중 14.6%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는 수출 100만달러당
6.1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을 의
미한다.

품목별로는 전·후방 연쇄효과가 큰
자동차 산업의 취업유발인원이 69만
5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반도체
(34.6만명), 일반목적용 기계(29.2만
명), 선박(22.9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유서경 무역 수석연구원은 "수출의
높은 경제성장 기여도는 우리 경제가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
진해야 함을 시사한다"며 "수출의 경제
적 파급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
출 품목 다변화를 통한 장기적인 경쟁
력 확보,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중소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확대 및
산업 생태계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
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근로복지공단, 전국 17개 지자체 협약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보험 가
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자체 협업
모델을 통해 6년 만에 영세 자영업자
등 산재보험 가입자가 약 240만명 증가
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9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
을 넓히고, 나아가 노무제공자, 예술
인, 자영업자까지 제도적 보호 대상
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
해왔다.

더불어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
업해 소규모 사업장과 자영업자 보험
가입을 유도했다.

그러나 여전히 보험료 부담으로 보
험가입을 기피하는 영세 사업주나 저

소득 근로자가 존재한다.

공단은 이같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
해 지난 2018년 4월 강원특별자치도와
업무협약을 체결, 지자체 예산으로 영
세 사업주 보험료지원을 시작했다.

이후 해당 사례를 협업 모델로 정형
화해 각 지자체에 사업을 제시한 결과,
올해 4월 전북특별자치도를 마지막으
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업무협약
을 확대했다.

공단의 사각지대 해소 노력과 지자
체 협력 결과,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2018년 말 265만 개 사업장 1907만명
에서 2024년 말 300만 개 사업장 2142만
명으로 증가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지자
체와의 협업을 더욱 강화해 일하는 모
든 사람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고
용·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공정하고 건강한 노사 관계 정립”

한전 노사, 중노위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전력 노사가 노사 분쟁 사전 예
방과 갈등 사전 조율 등 건전한 노사관
계 정립에 나선다.

한전과 전국전력노동조합은 지난
8일 나주혁신도시 한전 본사에서 중
앙노동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와 '공정노사 솔루션 및 직장인 고충
솔루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
혔다.

이번 협약은 노사분쟁을 예방하고
조직 내 갈등이 사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에 전문가 도움을 받아 갈등을 사전
에 조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향후 노동위원회는 보

유한 전문적인 인프라를 활용해 한전
내 노사 갈등 발생 시 신속하고 평화
적인 해결 도모를 위한 공정노사 솔루션
을 제공하게 된다.

또 근로자의 고충을 사전적·예방적
으로 해결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한전 노사는
1946년 노동조합 설립 이후 무분규 전
통을 유지해 왔으며, 최근 최악의 재무
위기 극복 과정에서도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며 "이번 협
약을 통해 더욱 건강한 노사 관계를 조
성하고 갈등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
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내수경기 침체 속 가맹 브랜드 수 첫 '감소'

공정위, 작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브랜드 1만2377개, 전년비 0.4% ↓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내수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가맹 브
랜드 수가 처음 감소했다. 다만, 가맹
점 매출은 소상공인 매출 대비 안정
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가맹본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2024년
도 가맹사업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체 가
맹본부 수는 8802개, 브랜드 수는 1만
2377개, 가맹점 수(2023년 말 기준)는
36만5014개로 성장 추세가 전년 대비
둔화했다.

가맹본부는 0.5%, 가맹점 수는 3.
4%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각각 6.5%

포인트, 1.8%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브랜드 수는 전년 대비 0.4%
감소해 공정위가 가맹사업 현황 통계를
발표한 2019년 이후 7년 만에 처음
으로 줄었다.

이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내수
경기 회복 지연과 자영업 경영 여건 악
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브랜드 수 감소는 직영점 운영
의무화(1+1) 제도 도입 직전 등록된 브
랜드들이 지난 해 대거 등록 취소된 영
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 보면, 브랜드 수는 외식(-
0.6%) 및 도소매(-4.0%) 업종에서 감
소했고, 서비스(1.7%) 업종은 소폭 증
가했다.

가맹점 수는 외식(0.6%), 도소매
(1.1%), 서비스(10.0%) 업종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업종별 브랜드 수 비중

은 외식(79.8%), 서비스(15.6%), 도소
매(4.6%) 순이고, 가맹점 수 비중 역시
외식(49.6%), 서비스(31.4%), 도소매
(19.1%)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2023년 기준 약 3억5000만원으로 전
년(3.4억원) 대비 3.9% 증가했다. 코
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이 완료되면서
서비스 업종 가맹점 평균매출액이 가
장 크게 증가(4.6%)했고, 도소매
(3.5%), 외식(3.0%) 업종이 뒤를 이
었다.

이는 같은 해 중기부가 조사한 소상공
인 평균 매출액(2.0억원)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소상공인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같은 기간 2.3억원에서 2.0억
원으로 14.9% 줄었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촌 마을회관 무장애·고효율로 새단장

농어촌공, 가이드라인 제작

한국농어촌공사가 9일 마을회관 신
축·개보수 시 이용할 수 있는 '마을회
관 설계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밝
혔다. 이를 통해 주민 이용 편의를 높이
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970년대부터 지어지

기 시작한 마을회관은 청장년층들의 집
회와 모임 공간으로 활용돼 왔다. 이후
농어촌 지역의 고령인구가 늘고 마을회
관의 용도도 교육·문화 활동 등으로 확
대되면서 주민들의 요구 역시 다양해졌
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
하지 못해 이용에 불편이 따랐고 단일
성능이 낮아 냉난방비 부담도 컸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설계기준에 ▲무
장애 설계 ▲내부 공간 활용성 확대 ▲
저에너지 설계 등을 반영해 마을회관
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무장애 설계를 도입해 고령자
가 마을회관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
도록 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회관 출입
로 높낮이 최소화, 미끄럼 방지 바닥재
적용, 출입문 등 안전손잡이 설치를 권
장하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전국 국립공원 내 'AI탐재 CCTV' 추진

환경부, 산불감시원 등 인력도 확충
김완섭 장관, 설악산 취약지구 점검

전국 각지 국립공원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고 진화 인력 및 장비의 확충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번 경남·경북·울산 산불
을 계기로 AI 기술이 적용된 CCTV를
전체 국립공원으로 확대해 감시체계
고도화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울러
고성능 진화차량 등의 장비를 비롯해
산불감시원 등의 인력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김완섭 환경부 장
관은 9일 오후 강원도 속초 소재 설악
산국립공원을 찾아 산불 취약지구를
점검했다.

김 장관은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서 산불 감시 CCTV 등 상황관제시스
템 운영상태를 확인했다. 또 산불 신
고·전파 지침서(메뉴얼) 및 탐방객
대피계획 및 초동 진화계획 등을 점
검했다.

이후 설악동 야영장 인근 침엽수

군락지에서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의
진화 훈련을 참관했다.

그는 "산불이 점차 대형화되는 추
세인 만큼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산
불의 초동 대응에 대한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 차원의 국립공원 산
불 대응책을 수립하는 한편, 정부 차
원의 산불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행정
안전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도 적
극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설악산은 강원지
역에서 산불 정리가 어려운 경사지 숫
자(54곳)가 가장 많다. 또 화재에 취약
한 침엽수 군락지 면적이 넓어 산불 예
방의 중요성이 높은 국립공원으로 꼽
힌다.

김 장관은 지난 3월28일 경북 청송
주왕산국립공원을 찾아 경북 산불 진
화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4월7일 경북
안동 산불 피해마을을 방문해 사업장
피해 현황과 폐기물 발생 상황을 둘러
봤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